

# 예비전력 정예화는 실전적 훈련으로부터

입력 2026.04.03 14:53 업데이트 2026.04.03 14:59



강용구 책임연구원 국방대학교 예비전력연구센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은 현대전에서 국가의 예비전력 역량과 효율적인 운용의 중요성을 재조명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개전 초기 상비전력의 우위에 의해 승리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전쟁 수행 과정에서 국가 전체의 역량을 군사력으로 신속하게 전환하고 지속할 수 있는 총체적인 국가 예비전력의 동원역량에 좌우됨을 보여준다. 이러한 관점에서 2026년 우리 군이 목표로 하는 실전적인 예비군훈련의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훈련 유형별 목적에 부합한 훈련 중점을 정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동원훈련 I 형은 군단 및 지역방위부대 특성에 부합한 실전적 훈련이 될 수 있도록 동시통합훈련을 내실 있게 해야 한다. 전방군단은 동원위주부대와 통합작전 수행 및 작계시행 능력 완성을, 지역방위부대는 총무계획과 연계해 작전계획의 실효성을 검증하도록 훈련해야 한다. 동원훈련 II 형은 전시 임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주특기훈련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훈련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지역예비군 훈련은 현역과 통합된 훈련이 되도록 훈련체계를 개선한다. 예를 들어 전반기 작계훈련은 예비군 위주의 절차식 훈련으로 진행하고, 후반기에는 현역과 통합해 행동화 위주 훈련을 편성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둘째, 드론 관련 예비군 훈련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러·우 전쟁 초기 게임체인저(Game-changer)로 등장해 현재는 오버매치(Over-match-압도적 전력 우위)로까지 발전된 드론은 현대전 필수 전력이 됐다. 우리 군은 상비병력을 대상으로 50만 드론 전사 양성 계획을 선언했지만 예비군은 이미 2025년부터 드론 친숙화 훈련을 시행해 왔으며, 지금까지 700여 명 이상이 자격을 취득했다. 2026년에는 교육용 상용 드론 확보와 예비군훈련장 내 드론 교육장 조성, 전문교관 양성 확대, 전술적 운용 중심의 드론 교육 모델 등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때 드론 관련 전문성을 갖춘 상비예비군을 교관으로 활용한다면 부족병력 문제를 해소하고 전문성도 향상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셋째, 과학화 동원훈련장 구축에 추진력을 높여야 한다.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한 과학화 훈련체계 구축과 현재의 시설 현대화뿐만 아니라 미래 예비군 자원 수 감소를 고려해 지역예비군 과학화훈련장과 통합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이와 함께 훈련하는 부대의 훈련 전념 여건을 보장할 수 있도록 훈련 진행과 시설·장비 관리를 전담하는 (가칭)동원훈련장 훈련대 편성도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넷째, 예비군훈련 참가비를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 올해 동원훈련 I 형 훈련비는 8.2만 원에서 9.5만 원으로, 동원훈련 II 형 훈련비는 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급식비는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됐다. 또한 5~6년 차 지역예비군에게 2만 원, 학생예비군(기본훈련)에게 1만 원의 훈련비가 처음으로 지급된다. 장기적으로는 예비군훈련 참가자 모두에게 최저임금

수준의 훈련참가비를 지급하고, 급식비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단계적으로 인상해 나가야 한다.

이와 함께 상비예비군의 임무와 역할에 부합한 훈련프로그램 표준화, 훈련참가비 현실화, 다양한 복무 혜택 부여 등을 통해 예비군으로서 훈련과 복무에 대한 자긍심이 고취되도록 제도를 발전시켜야 한다. 2026년은 실전적인 예비군훈련을 통해 예비전력 정예화를 달성함으로써 예비전력이 총체전력의 한 축으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해 본다.

<저작권자 © 국방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